

『탄소중립개론』

I. 기후변화의 과학과 경제학

제 5장 탄소중립과 시민사회의 역할

목차

- 01 기후위기 대응의 제 3축: 시민사회
- 02 탄소중립을 위한 거버넌스와 협력 사례
- 03 시민사회와 탄소중립:
기술, 행동, 감시의 주체
- 04 시민사회와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 05 시민사회와 기후소송
- 06 시민사회 참여의 한계와 비판적 성찰

1. 기후위기 대응의 제 3축: 시민사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기후위기의 현실

- 2024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 기록, 2015~2024년이 가장 더운 10년
- 폭염, 가뭄, 산불, 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 빈번·심화, 식량안보·생태계·난민 등 사회적 파급 확대

탄소중립의 시급성

- 파리협약 목표(1.5°C 이내) 달성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중립 필수
- 현재~10년이 기후 대응의 결정적 시기, 티핑포인트 돌파 경고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의 정의

- 시민사회: 정부·기업 외 시민 결사체
-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학교, 종교단체, 일반 시민 포함
- 기후위기 대응의 제3축으로서 중요성 증대
- 실질적 전환의 핵심 동력

기후위기 인식 확산

-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대중 교육 주도
- 과학적 정보의 대중화 및 확산
- 학교, 지역사회 기반 기후교육 확대
- 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제고

저탄소 생활 실천

- 개인 및 공동체 차원의 탄소감축 활동
- 에너지 절약, 친환경 소비, 제로웨이스트 등
-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사회변화로 연결
- 시민 주도 저탄소 생활양식 확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 정부와 기업의 기후정책 모니터링
- 그린워싱 감시 및 비판
- 실효성 있는 대안정책 제안
- 국내외 정책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와 기업을 넘어선 제3의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특히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주체로,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중

시민단체/NGO의 활동

- Greenpeace, 350.org 등 글로벌 캠페인 전개
-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 국내 단체의 정책제안 활동
- 기후위기 관련 연구, 교육, 캠페인 다방면 기여

지역사회 기반 실천

- 에너지 자립마을, 에코마일리지(서울) 등 성공사례 증가
- 주민주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 공유경제, 탄소중립 마을 프로젝트 확산

시민 행동과 소비자 운동

- 윤리적 소비, 플라스틱 프리 등 집단 캠페인
-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청년 중심 기후행동
- SNS·디지털플랫폼(#MeatlessMonday 등)을 통한 행동 확산

사회시스템 재구조화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

- 탄소중립 달성 위해 사회 전체의 구조적 전환 필수
- 기존: 화석연료-중앙집중형 인프라-선형소비모델
- 현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양립 불가능
- 근본적 변화 없이는 기후목표 달성 불가능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

- 분산형, 순환경제, 회복력(City Resilience) 강조
- 녹색 인프라 확장 및 자연 기반 해법(NbS) 확대
- 소규모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형 에너지
- 기후친화적 도시 설계와 커뮤니티 기반 재난대응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요건

녹색 인프라 확장

도시 녹지, 빗물정원, 자연기반해법(NbS) 확대로 탄소흡수 및 회복력 강화

분산형 에너지 공급

소규모 재생에너지,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지역 중심 에너지 시스템 구축

기후친화적 도시 설계

고밀도 개발, 대중교통 중심, 보행·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배출 감소

재난대응 체계 구축

디지털 조기경보, 커뮤니티 기반 재난대응으로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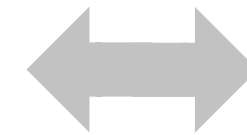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국가-지방-민간-시민사회 협력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형평성 확보

-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 재교육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 확대
- 취약계층 기후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의 공정한 분배
- 사회안전망 강화로 전환 과정의 충격 완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지역사회 기반 거버넌스

- 지역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 확립
-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시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기후사업 발굴
- 지역 공동체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2. 탄소중립을 위한 거버넌스와 협력 사례

탄소중립 거버넌스



정부-기업-시민사회 협력 모델

- 정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센티브 제공
- 기업: 기술혁신, 투자, 비즈니스 모델 전환
- 시민사회: 정책 감시, 대안 제시, 실천 확산

EU 'Fit for 55' 패키지 사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 설정
- 시민단체(CAN Europe 등)의 정책 과학성·정당성 요구
- 에너지 빈곤·공정 전환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촉구

기업-시민사회 갈등과 조정

- 시민사회는 기업의 미흡한 탄소 감축 이행에 대해 법적·여론 압박을 통해 변화를 유도
- 이러한 갈등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 강화와 실질적인 기후행동으로 이어지는 조정 과정으로 작용함

네덜란드 Shell 소송 사례

-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가 소송 제기
- 법원, 2030년까지 45% 감축 명령 획득
- 기업의 공급망 전체(Scope 1,2,3) 감축책임 인정

테슬라(독일) 환경갈등 사례

- 베를린 공장 건설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갈등 발생
- 물 사용량, 산림 훼손 등 환경 이슈 제기
- 갈등 후 환경기준 강화 및 지역사회 소통 확대

코카콜라 플라스틱 오염 대응

- Break Free From Plastic 운동의 주요 타겟
- 플라스틱 오염 책임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
- 리필용기 확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 증가

금융의 탄소중립 역할

ESG 금융

-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결정에 통합
- 블랙록(BlackRock): 탄소집약 기업 투자 축소
- ESG 공시 요구로 기업 변화 유도
- 기후위험을 재무적 리스크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

임팩트 투자

- 재무적 수익과 함께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
- 탄소 포집, 재생에너지, 지속가능 농업 등 투자
- 혁신적 기후솔루션에 자본 공급 역할
- 사회적 기업과 친환경 스타트업 성장 지원

녹색 택소노미

- EU: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분류체계
- 투자자들의 녹색 활동 자본 배분 기준 제시
- 그린워싱 방지와 투명성 확보 메커니즘
- 녹색금융 확산의 제도적 기반 역할

녹색채권(Green Bonds)

- 환경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한 특수목적 채권
- 공공·민간 탄소중립 사업 재원 마련
- 발행규모 지속 증가, 글로벌 시장 확대
- 투자자들의 지속가능 투자 수요 충족

통합적 거버넌스와 미래 과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정부·기업·시민사회·금융의 유기적 협력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로, 각 주체가 고립된 행동이 아닌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실질적 전환이 가능

시민 역량 강화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의 기후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여야 함

미래 과제

탄소중립 거버넌스는 제도적 틀을 넘어 실질적 전환역량을 조직해야 하며, 향후 협력 모델의 포괄성과 지속가능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3. 시민사회와 탄소중립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의 역할

시민 주도 데이터 수집	지역 데이터 확보	정책 투명성 강화	대표 사례
- 시민들이 직접 온실가스와 환경 데이터를 측정, 수집하는 과학적 활동 - 전문가-시민 협력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 마련	- 지역적·미시적 환경 데이터 확보로 정책 근거 강화 -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개발 가능	- 시민 참여로 정책 과정 투명성 확보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신뢰도 향상 - 정책 수용성 제고 효과	- Air Quality Egg(유럽): 대기질 모니터링 - NASA GLOBE(글로벌): 환경 관측 프로그램 - 우리동네 미세먼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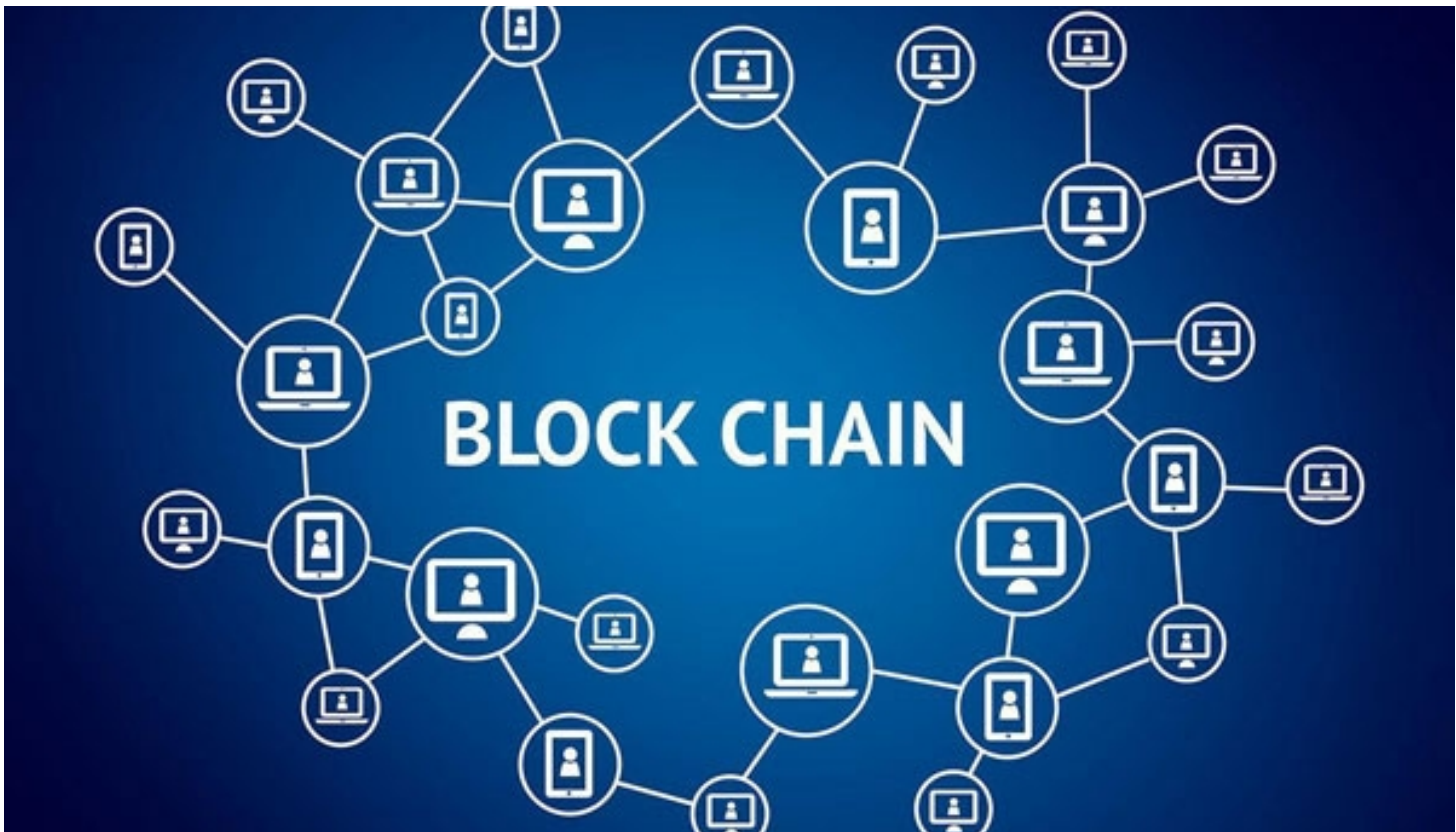
- 시민과학은 시민들이 과학적 방법으로 환경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참여형 활동
-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확립, 시민의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함
-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서 시민과학은 공식 데이터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고 있음

디지털 플랫폼과 탄소중립 캠페인



SNS 해시태그 활용 캠페인

- #MeatlessMonday: 육류 소비 줄이기 운동으로 식품 산업 탄소배출 감소 효과
- #PlasticFreeChallenge: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로 석유화학 산업 탄소배출 감소
- 간편한 참여와 확산으로 일상 속 기후행동 촉진



블록체인 기반 탄소감축 인증

- 개인·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기록하고 인증
-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소비 등 활동 데이터화
- 탄소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동기 강화

지역 기반 순환경제 모델

덴마크 삼소섬	풍력·태양광 100% 에너지 자립,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성공 사례
태양광 시민발전소	시민 공동투자로 태양광 설비 구축, 수익 공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네덜란드 Precious Plastic	플라스틱 재활용 오픈소스 기술 공유, 지역 내 자원순환 촉진
에너지 자립마을	서울 성대골, 전북 부안 등 에너지 절약과 생산의 지역 모델 구축
자원순환 공동체	공유 부엌, 수리 카페, 지역화페 등 자원 효율적 사용 시스템 구축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 (1)



로컬푸드 소비와 푸드마일 단축

- 지역 내 생산-소비로 운송 거리(푸드마일) 감소, 온실가스 최대 90% 감축 효과
- 신선도 향상과 지역농업 활성화로 식품 폐기물 감소 및 지역경제 선순환 창출

친환경 제품 소비와 탄소라벨링

- 탄소라벨링 제품 선택으로 기업의 저탄소 생산방식 전환 유도
- 소비자 인식 변화가 시장 전체의 탄소감축 흐름 형성, 기업 ESG 경영 확산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 (2)

소비자의 선택은 시장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

→ 윤리적 소비, 불매운동, 공유경제 참여, 그린워싱 감시 등 다양한 소비자 행동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윤리적 소비와 탄소중립 기업 지원

- 환경·사회·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소비 확산
- 탄소중립 목표 기업(패타고니아, 테슬라 등) 성장 촉진
- 공유경제, 순환경제 등 혁신 비즈니스 모델 확대

불매·감시운동의 영향력

- 환경파괴적 기업 제품 불매로 기업 정책 변화 압박
- 소셜미디어 활용한 집단행동으로 영향력 확대
- 기업의 환경정책 개선과 투명성 강화 유도

그린워싱 감시자 역할

- ESG, RE100, 탄소상쇄 등 허위·과장된 환경정책 감시
- 시민단체의 기업 환경성과 검증 활동 확대
- 실질적 탄소감축 정책 견인 및 시장 신뢰 구축

4. 시민사회와 기후정의

기후정의의 개념과 중요성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된 구조적 문제
- 기후변화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개발국에 집중
-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간 불일치 문제
- 취약계층은 적응 역량과 자원 부족으로 더 큰 피해



기후정의의 핵심 요소

- 책임의 공정한 배분: 역사적 배출량에 따른 차등적 책임 인정
- 피해취약계층 보호: 기후재난 대응 우선 지원
- 정의로운 전환: 산업전환 과정의 노동자·지역사회 지원
- 세대 간 형평성: 미래세대 권리 보호

기후정의의 탄생배경

미국 환경정의운동

- 1960~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환경정의운동이 기후정의의 모태
- 환경오염과 피해가 인종·계층 문제와 결합된다는 인식 확산
- 환경불평등은 사회구조적 차별의 결과라는 관점 형성
- 환경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

워렌카운티 사건

- 1982년 노스캐롤라이나 워렌카운티 유해폐기물 매립 반대 사건
- 흑인 저소득층 지역에 유해폐기물 매립 결정에 대한 저항
- '환경 인종차별'이라는 개념 등장
- 환경정의 논의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적 의미 지님

환경정의에서 기후정의로

- 2000년대 이후 지역적 환경문제에서 글로벌 기후위기로 확장
- 환경정의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적용되며 개념 확대
- 기후변화의 책임과 피해의 불균형에 주목
- 평등, 인권, 집단적 권리, 역사적 책임 등의 개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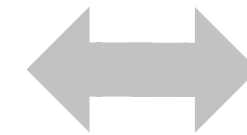
글로벌 불평등 해소 운동

-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책임과 부담 논의
-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등에서 '공동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 기후정의 운동은 글로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연대로 발전
- 기후위기 취약국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확장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피해

- 모든 인간이 기후위기에 동일한 영향을 받지 않음
-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현상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거주민 강제이주
 -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농업 피해와 식량가격 상승
 -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노인, 야외노동자 등) 건강 위협
- 적응 자원(재정,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 격차
-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기후대응 역량의 현저한 차이
- 기후위기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



불공정한 전환 부담

- 화석연료 산업 집중지역과 노동자들의 전환 부담 문제
 - 석탄발전소, 광산 등 폐쇄 시 지역경제 타격
 -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 위험
- 탄소중립 정책 비용의 불균등한 분담
 -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 친환경 제품·서비스 접근성의 계층 간 격차
-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기후대응 책임과 비용 분담 문제
 - 역사적 배출 책임과 현재의 감축 의무 간 균형

기후정의 실현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대중 인식 제고와 교육

기후위기와 정의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 확산 및 교육 활동 전개

정책 옹호와 감시

기후정의 중심의 정책 수립 촉구 및 이행 감시, 대안 정책 제안

취약계층 역량 강화

기후취약계층의 조직화 지원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 역량 강화

공동체 기반 솔루션 개발

지역사회 중심의 기후대응 모델과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 개발·보급

국제연대와 법적 대응

글로벌 차원의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와 법적 책임 추궁

세대 간 형평성과 탄소예산

세대 간 공정성 문제	미래세대 비용 전가	기온 상승에 따른 위험	탄소예산의 개념과 중요성
- 탄소중립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공정성의 핵심 과제 - 현세대의 결정이 미래세대의 생존과 복지에 직결 - 미래세대의 권리와 이익을 현재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함	- 현재의 감축 노력 지연은 미래세대 비용 전가 - 기후위기 대응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 증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미래세대 자유권 침해 위헌 결정	- 기온 1.5°C 상승: 폭염·가뭄 빈도 2~3배 증가 - 기온 2°C 상승: 생물다양성 급감, 식량안보 위협 - 기온 3°C 상승: 수억~10억 명 기후난민 발생 위험	- 탄소예산: 인류가 추가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 - 1.5°C 목표 달성 위한 잔여 탄소예산 급감 중 - 조기 감축의 중요성과 세대 간 책임 분배 문제 제기

- 세대 간 형평성은 기후정의의 핵심 요소로, 현세대의 결정이 미래세대의 생존 조건을 결정함
- 제한된 탄소 예산은 조속한 감축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 이는 환경문제를 넘어 세대 간 윤리적 책임의 문제
- 한국의 기후소송에서도 미래세대의 기본권이 중요한 논거로 인정받고 있음

5. 시민사회와 기후소송

기후소송의 의의와 영향



시민사회의 법적 대응 수단

-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와 기업의 미흡한 대응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시민사회 활동으로, 강력한 기후 정책 촉진과 책임 분배의 수단

기후정책과 기업 전략 변화 촉진

- 성공적 소송은 정부의 기후정책 강화와 기업의 ESG 전략 변화에 실질적 압력으로 작용
- 기후소송 확산으로 정부·기업이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 탄소중립 정책 도입 유도

외국의 주요 기후소송 사례

- 기후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중요한 수단
- 특히 유럽에서 시작된 주요 소송들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선례를 남기고 있는중

우르헨다 재단 대 네덜란드

- 네덜란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불충분성 주장
- 2019년 대법원 최종 판결: 정부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 의무 부과
- 정부의 구체적 감축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원이 인정한 획기적 사례

노이바우어 대 독일 연방정부

- 독일 기후보호법이 미래세대 자유권 침해한다는 청년들의 헌법소원
- 2021년 연방헌법재판소: 2030년 이후 감축 경로 불명확성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
- 탄소예산 개념이 법적 논거로 사용되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헌법적으로 인정

셸 기후소송(네덜란드)

- NGO와 시민들이 석유기업 셸에 파리협약에 맞는 감축 의무 요구
- 2021년 법원 판결: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 감축 명령
- 공급망 전반(Scope 1, 2, 3)까지 감축책임 확대, 민간기업 대상 첫 구체적 감축 판결

외국의 주요 기후소송 사례 (2)

셀 기후소송(네덜란드)

- NGO·시민들이 셀에 파리협약에 맞는 감축 의무를 요구
- 법원,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 감축 명령
- 공급망 전반(Scope 1, 2, 3)까지 감축책임 확대
- 민간기업 대상 첫 구체적 법적 감축 판결

줄리انا 대 미국 정부

- 미국 청소년·시민단체 "화석연료 정책은 헌법상 권리 침해"
- 청소년의 당사자 자격 인정
- 자연자원의 세대 간 신탁관리 의무 적용
- 미래세대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

필리핀 인권위 진정 사건

- 재난 피해자·시민단체가 다국적 화석연료 기업들 상대로 기후변화 인권 침해 책임 제기
- 기업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인정한 인권상 최초 결정
- 국제 인권법 적용 확대
- 기후위기 취약국 보호 선례 마련

기업의 기후변화 인권 침해

- 기후소송은 기업의 ESG 전략 변화에 실질적 압력으로 작용
-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이행 촉진
-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 확대 인식
-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한국의 주요 기후소송 사례

정부의 구체적 감축 의무 인정 <청소년기후소송(2020)>

- 청소년들이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방치로 국민 권리 침해라 주장, 헌법소원 제기
-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
-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를 국민 기본권과 직접 연결해 인정한 판례로 평가됨
-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와 미래세대 권리 보호 명시

시민사회의 정책 감시 역할 강화 <시민기후소송(2021)>

- 시민·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실효성 부족을 위헌으로 헌법소원 제기
- 청소년기후소송과 병합 심리되어 헌법불합치 결정
- 시민사회의 정책 감시와 법적 대응의 중요한 사례
-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시민참여의 법적 정당성 확보

미래세대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 아기기후소송(2022)과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

- 5세 이하 영유아·가족이 건강권 등 침해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 탄소중립기본계획의 구체성·재원 조달 미흡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부의 기후정책 강화 요구
- 세대를 아우르는 기후정의 실현의 법적 기반 마련

6. 시민사회 참여의 한계와 비판적 성찰

시민사회 참여의 한계: 대표성과 지속성



대표성과 포용성의 제약

- 시민사회는 전체 시민의 민주적 대표로 간주되나, 실제로는 편향과 한계 존재
- 이념, 계층, 지역별로 불균형한 조직구성
- 사회경제적 약자·청소년·이주민·저소득 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 반영 부족
- 글로벌 시민사회 논의에서 북반구 중심의 담론이 남반구 맥락을 소외시키는 '기후 식민주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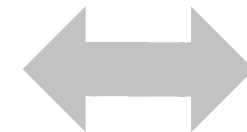
참여의 지속성과 실효성 문제

- 시민사회 활동은 자금, 인력, 조직 기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속성 확보 어려움
- 프로젝트 중심의 재정구조→일회성 캠페인/행사가 되기 쉬움
- 제도·법 개혁 등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주기보다 인식 제고 역할에 그치는 경우 많음
- 정책 과정에 시민 의견이 실질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 피로'와 수동적 후퇴 현상 발생

시민사회 참여의 딜레마: 계층화와 정치화

참여의 계층화

-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중산층·고학력자·도시거주자 중심으로 경직될 위험
- '열려 있는' 참여 공간조차 실질적으로 접근 불균형 존재
- 여성·청년·농어촌·비주류 계층 참여는 주변화되는 경향
-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 접근성 차이
-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참여 가능한 구조적 문제
-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보정노력 필요
-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 메커니즘 개발 필요
-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한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모색



정치화와 탈정치화

-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이슈이나 다양한 접근 방식 존재
- 일부 시민사회는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실질정치 개입 회피
- 반대로 특정 정당·이념에 편향된 정파화 위험도 상존
- '정치화'와 '탈정치화' 사이의 경계, 참여의 진정한 정당성을 위협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변화 추구의 어려움
-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공통 가치 기반 접근 필요
- 본질은 정치성의 회피/편향 문제가 아니라, "시민참여가 실질적 공적결정 공간인가"에 달림
-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포괄적 기후행동 필요

제도적 포섭과 상징화의 위험

형식적 참여	시민사회 목소리가 정책구조에 형식적으로만 포함되는 문제
홍보 수단화	정부·기업이 시민단체 참여를 ESG·홍보 이미지로만 활용
권한 부재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책임구조 없는 '상징적 참여'
실질적 참여 보장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필요
역량 강화	시민 역량 강화와 대표성 갖춘 시민사회 구성 필요

결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부와 기업의 정책을 보완하고 견제하는 핵심 축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시민사회의 포용성과 대표성 강화: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기후시민교육과 공동체역량 강화:
시민들의 기후위기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 확대
- 참여모델의 다양화와 실질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참여 모델 개발
-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한 통합적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